시민일보 SIMIN NEWSPAPER
since 1994
시민일보 창간31주년
지방자치의 지킴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시민참여 정론직필

시민일보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 02)3676-2114 www.siminilbo.co.kr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제6122호

섬김·모심·채움·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경민대학교
1·7호선 도봉산역
무료 통학버스 운행

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 野 "이재명 구하기 꼼수"

김병기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가 부담"

김도읍 "'李 면소' 판결 조치… 근로자·투자자 피해"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려는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로 기본 방향을 결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던 '배임죄'(에 대한 폐지 요구는) 재계의 숙원이자 핵심 사항"이라며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방안과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을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 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정했지만 '형법상'인지 '상법상'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임죄는 (기업에 손실을 가하는)기업 경영진, 사업가 등이 처벌 주체"라면서 "결국 (배임죄 폐지로)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가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민주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의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목적"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 당 회의에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며 "그렇다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뻘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거냐"고 반박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는 '임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배임죄 1심 판결 3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경우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계주가 곗돈을 안 준 경우, 종중 대표자가 종중 토지를 무단 매도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배임죄가 기업 뿐 아니라 공공·민사 영역까지 '만능 처벌 조항'처럼 쓰인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지귀연 '접대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현재로선 징계 사유 안돼"

대법 감사위 "공수처 조사 후 처리"… 최종 결론 보류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는 징계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 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술집에 동석했던 A·B 변호사 2인은 지귀연 법관이 ▲15년 전 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지 법관보다 법조 경력 7년, 9년 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리감사관실은 지 법관 의혹과 관련해 ▲주점의 현장조사와 사장 진술 청취 ▲동석자들 진술 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확인 ▲국회 법사위민주당 간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한 정보와 자료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술집에 동석했던 A·B 변호사 2인은 지귀연 법관이 ▲15년 전 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지 법관보다 법조 경력 7년, 9년 후배다.

당시 지 법관이 법조 선배로서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코로나 전까지는 연 1회 정도 만나왔는데 평소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비용은 지 판사가 지불했다.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된 경위는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그가 평소 다니던 주점으로 이동했으나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법관과 B변호사는 (이동 장소에 대한 정보를)들지 못했고, 내부에 들어가보니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이 같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이후 한두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고 그때까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법관 재판부에 관련된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 관련성 인정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 감사위는 법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감사위원 중 6명이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檢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매출실적 없어도 기술력 확보땐 OK

경기도, 300억 '청년 창업 특례보증'

김동연 현장투어 후속 조치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제도는 지난 8월 26일 양주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적극 검토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양주시 청년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후 즉석에서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제도를 만들어 30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 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조건은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 하고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연 0.8%가 적용돼 한도 우대와 금융비용 인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실사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술력, 사업모델, 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협업해 정책에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모바일 앱 이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이달부터 출생가구 차비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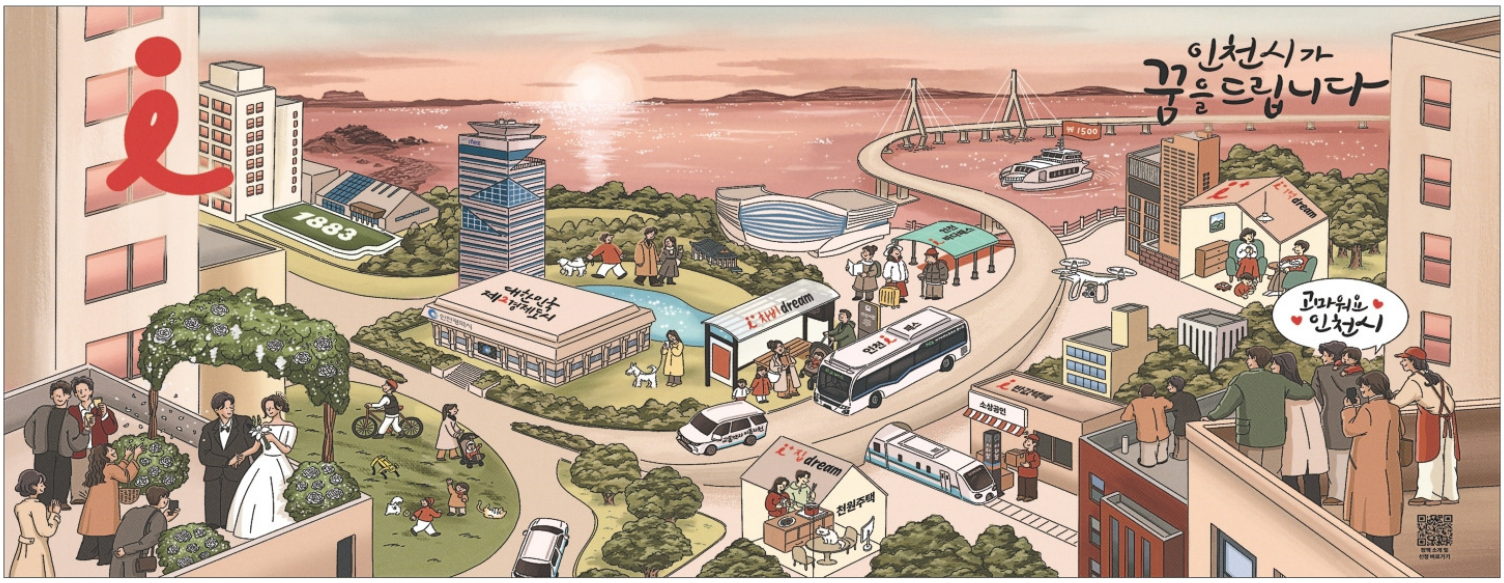
인천시, 교통비 50~70% 환급

인천시가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패스(i-패스)'에 출생가구 부모 혜택을 추가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사업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지하철 역사와 열차를 돌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차비드림 사업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나섰다.

차비드림은 인천 i-패스 기반으로 출생가구 부모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의 출생가구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인천시 거주 출생가구 부모이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첫째 자녀 출생시 부모는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자녀 이상 출생부터는 70%까지 환급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